

www.djvote.net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철회) 명단

(17대 총선 출마 후보예정자)

2004. 2. 24.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전국총선시민연대 www.RedCard2004.net

301-825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 1층 / 전화 042)331-0415 / 팩스 042)252-6976
돈선거 및 부정선거 고발센터 042)331-8298(빨리고발)

자료집 목차

식	순	3
선 정 경 위		4
대전지역 공천반대(철회) 명단		11
공천반대(철회) 명단 주요선정사유 요약		13
공천반대(철회) 명단 선정의 변		14
향후계획		16
정치권과 유권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	18
[참고1]유권자위원회		20
[참고2]공천반대(철회)명단 최종심사자료		21
[참고3]대전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26

식 순

- 인 사 말
- 선 정 경 위
- 선 정 의 변
- 명 단 발 표
- 유권자위원회 호소문 발표
- 후 속 계 획 발 표
- 질 의 응 답

선 정 경 위

1.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철회) 명단 발표

- 2004년 2월 11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발족 기자회견 당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전국총선시민연대가 사회 각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공천반대 인사 선정기준을 토대로 하되, 낡은 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그 선정기준에 따른 17대 총선출마 후보예정자 개개인에 대한 자료조사 및 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공천반대(철회)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지역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최대한 적법한 방법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의 근원인 돈선거와 지역감정 선동정치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행동단을 조직하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밀착감시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만약 선거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 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입니다.

2. 공천반대(철회) 인사 조사 및 선정

1) 공천반대(철회) 명단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총선거기획팀 구성

-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지난 1월 16일 낙천낙선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자료조사 작업을 진행할 총선거기획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총선거기획팀의 역할은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분류, 입력, 정리하여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심의과정에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1차로 정리된 자료는 증빙자료 수집을 거쳐 선정 절차에 따라 정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의 검토, 유권자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체계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② 조사대상 및 기간

- 조사기간 :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 조사대상 : 17대 총선 출마 후보예정자 36명 (16대 국회의원 포함)

※ 단, 전국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1, 2차 공천반대 명단에 대전 지역 총선출마 후보예정자가 포함된 경우, 즉 공천반대 인사로 선정된 인사와 불출마 예정자로 인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사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소명자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불출마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온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③ 조사 자료

- 16대 국회 의정활동 기록 및 의정평가자료
- 관련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4개 지역방송사 및 인터넷신문 기사 포함)
- 각종 판례 등 법률 문헌
- 시민사회단체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서 및 관련기사 발간자료집
- 총선출마 후보예정자 소명자료
- 각종 제보자료

④ 자료검토 상의 특이사항

- 16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 총선시민연대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관련사건에 대한 지역언론 기사를 재확인하였고, 가능한 공소장 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확보,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 출마 후보예상자들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공직선거 출마의 경험이 없는 경우,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증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검증작업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총선거획팀은 17대 총선출마 후보예상자 가운데 공천 유력인사 및 출마가 유력한 인사 36명에게 소명자료를 개별 요청하였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의를 통해 재차 확인작업을 거쳤습니다. 제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자료가 접수되었으나 시민단체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추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언론이나 법원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활용하였습니다.

2) 선정과정 및 절차

- 2004년 1월 26일 이전부터 최근까지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04총선 출마예상자 명단과 각 당 공천신청자 명단 등을 종합하여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인사나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5일, 전국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 1차 명단 발표에서 활용한 주요심사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검토대상자 36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11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발족 직전까지 논의해오던 대전 지역 낙천낙선대상자 추가선정 발표에 대해 전국총선시민연대 검증제외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 결성대표자회의에서 추진기로 결정하고 발족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전국 총선시민연대가 활용한 선정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과 정서에 입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병합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17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 추가선정 발표에 대한 대전지역 유권자들의 반응 및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디지털정치문화연구소에 의뢰해 대전지역 유권자 1,248명을 대상으로 ARS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 3>을 참조할 것.
- 2004년 2월 18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는 17대 총선출마 후보예정자 중 검토대상자 36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후보에게는 추가질의사안에 대해 소명요청 공문을 재발송하였습니다. 이에 2월 23일까지 총 29건의 소명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 2004년 2월 20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

준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2004년 2월 24일,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36명의 검토대상자 중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여부가 불확실한 인사, 밀실 공천에 탈락하여 당적을 변경한 경우, 그리고 자민련의 경우 공천신청과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천이 유력한 전직 구청장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용기준 및 주요검토대상자 5명의 유권자위 심사자료를 확정하였습니다.
- 2월 24일 오전 11시, 대전 YMCA강당에서 유권자위원회를 소집하고 총선기획팀이 제출한 주요검토대상자 5명에 대해 각각의 토론과 찬반토론 및 의견 분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권자위원회는 모아진 검토의견을 대표자회의에 전달하고, 이어 대표자회의,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유권자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검토하여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철회)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3. 공천반대(철회) 명단 선정을 위한 세부적용기준

1) 공천반대(철회) 명단 선정 기준 (요약)

○ 적용원칙

- 전국총선시민연대 선정기준
- 대전총선시민연대 선정기준

○ 전국총선시민연대 선정기준

- 부패비리행위 :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
 - ① 부패비리 연루행위는 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이 밝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용
 - ② 불법정치자금, 수수, 뇌물, 알선수재 등 부패사범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용
 - ③ 현재 검찰 수사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본인이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툼이 없는 한 우선적용
 - ④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자 가운데 자금 수수사실 인정하고 영수증처리를 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선적용
 - ⑤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두고 있으나 본인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수수사실은 시인하고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하는 경우 정치자금으로 준용하여 적용
 - ⑥ 공직선거 진출 이전에 행한 개인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비록 사법적 처벌은 없었으나 떡값, 전별금 수수 등 일반국민이 지탄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비리 행위를 저지른 자도 적용(자질의 문제)
 - ⑦ 제외 : ④항에서 영수증을 처리한 경우, ⑤항에서 수사기관은 뇌물 혐의자라 보지만 본인이 금품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선거법위반행위 :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된 사건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사건
 - ① 선거법 위반 대상기간은 15, 16대 총선으로 제한
 - ② 본인 및 선거법상 연대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사면, 복권 등과 무관하게 우선적용
 - ③ 향후 17대 선거운동 기간중 돈선거 행위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낙선대상자로 선정
 - ④ 제외 : 선거법 위반이 경미한 경우

- 반인권 전력, 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 ① 5.16쿠데타 주역,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관계자 우선 적용
 - ② 각종 공안사건, 시국사건에서 고문,은폐,조작,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책임이 있는자 우선 적용

-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인 철세정치 행태
 - ① 경선불복 행위자 우선적용
 - ② 권력과 대세를 추종하는 반복적 철세정치 행태를 보인자 우선적용

- 병합기준
 - ① 선거법위반 : 당선무효형 이하의 선거법위반은 병합적용
 - ② 의정활동 불성실성 : 본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면서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정치인 병합적용
 - ③ 반유권자적, 반의회적 행태 :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발언 등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근거없는 폭로를 일삼은 경우
 - ④ 도덕성 : 병역, 납세 등 의무이행 정도와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여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기본정보로만 활용)
 - ⑤ 자질 : 욕설(폭언), 몸싸움, 성희롱, 차별(비하)발언 등이 심한 경우
 - ⑥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종합적 판단

○ 대전총선시민연대 선정기준

① 기회주의적 정치행태

- 권력과 대세를 추종하는 철세정치 행태를 보인 경우

② 지역감정

- 지역감정 조장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정도가 중한 경우

③ 반유권자적 행위

- 유권자와의 약속을 파기한 자치단체장의 중도사퇴

④ 반개혁적 행위

- 방탄국회, 의원면책특권남용 등 반개혁적 행태
- 소수자인권탄압 등 반인권행위

2) 선정 결과

○ 공천반대(철회) 인사 : 총 5 명 선정

공천반대(철회) 명단

1.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중구, 16대 국회의원)
2. 오희중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3. 이병령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4. 임영호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동구)
5.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서구, 16대 국회의원)

공천반대(철회) 명단 주요선정 사유 『요약』

1.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중구, 16·15·14·12·11대)

- ① 2004. 2. 9. 불법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구속중인 한나라당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 결의안 국회 본회의 긴급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서명. ② 2002. 7. 8.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동료인 함석재 의원을 상임위원장 배정요청하자 이규택 총무가 "왜 반말을 하나", "한번 붙어보자는 볼래"하면서 상의를 벗자 본인도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고성이가 오가며 몸싸움 직전 상황 연출.

2. 오희중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 ① 반유권자적 행위- 자치단체장 중도사퇴로 인한 유권자와의 약속파기

3. 이병령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 ① 반유권자적 행위-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4. 임영호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동구)

- ① 반유권자적 행위- 자치단체장 중도사퇴로 인한 유권자와의 약속 파기 ② 반개혁적 행위- 장애인인권 탄압

5.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서구을, 16·15대)

- ① 2002.11.14 자민련 탈당, 2002.11.15 한나라당 입당 ② 반복적인 지역감정 선동

선정의 변

- 지역정치의 변화, 희망의 정치를 희망합니다 -

오늘 우리는 지난 2월 11일 발족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전국총선시민연대의 1, 2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와 별도로 공천반대(철회) 명단을 발표합니다. 지난 전국총선시민연대의 1,2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에 있어서 원외인사의 경우, 검증 대상 인물의 방대함으로 인해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공천반대(철회) 인사의 선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정한 공천반대(철회) 명단은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2000년 총선연대 낙선대상자도 빠져있으며, 2004년 총선시민연대 1차 공천반대 인사도 빠져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정기준 적용에 있어 출마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공천신청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자민련의 경우에는 공천이 유력한 전직 구청장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최종심사대상에 제외하였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불어 이들 외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인사가 보류대상자로 추가심사 대상임을 밝힙니다. 결코 이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전총선시민연대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대전총선시민연대는 자료수집부터 정리, 분석, 평가, 기준적용, 대상자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았습니니다. 만약 하나 있을지도 모를 실수를 막기위한 긴장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공천반대 인사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줄 모르는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과 자정능력을 상실해버린 정치권 앞에서 낙천낙선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우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 책임감으로 공천반대(철회) 명단 선정과정에 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대전지역 유권자와 개별 정치인, 각 정당인들에게 내어 놓습니다. 비록 우리의 작업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공익적 양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명단이기에 충분히 그 뜻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부패, 무능, 저질 정치인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가, 지역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치인이라면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대전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철회) 명단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간절함이었듯이,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뭉은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도록 심판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명단이 지역정치의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여는 노릇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04년 2월 24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향 후 계획

1. 공천반대(철회)자에 대한 대응 활동

- 공천반대(철회) 명단을 각 정당 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에 전달, 해당 정당 시지부에 전달
- 대전충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철회) 인사에 대한 전국적 공조활동을 추진
- 공천반대(철회) 인사를 각 정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촉구 선언을 추진
- 오늘 발표된 인사를 제외하고도 불출마자, 출마여부 불확실자, 의혹이 가지만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보류된 자에 대해서 출마 의사의 확인 및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공천 반대 및 낙선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검증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할 것임.

2. 부패정치의 퇴출을 위한 온라인 시민행동

- 전국충선연대가 전개하는 네티즌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를 모아 온라인 캠페인 “ClikNClean(클릭앤클린)”을 벌일 것임.
- 10만 온라인 회원가입 운동을 통해 공천반대(철회) 리스트 전파 및 온라인 낙선운동 추진

3. 돈선거,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 집중감시활동 등 유권자운동

- 각 구별 유권자 시민행동단을 구성, 각종 금권선거 및 지역감정 조장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것이며 경선과정에서도 직접 감시활동을 전개.
- 부패정치 돈선거 지역감정 반대 각종 홍보캠페인 및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유권자 릴레이선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대학생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부재자투표 신고 운동 등을 통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개설을 추진.
- 향후 불법자금 조성, 돈선거 사실이 확인된 후보, 지역감정 조장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당선된다 해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 시킨다는 목표로 강력한 시민 행동 추진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 유권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 여러분!

2000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낙천낙선운동으로 유권자 혁명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낙천낙선운동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넘어 정치의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유권자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 낙천낙선 물결은 거리를 수놓았고 마침내 유권자의 결단으로 이어져 우리지역 낙천낙선 대상자 85%을 낙선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패와 불신, 분열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균열을 일으키며 희망과 감동의 씨앗을 뿌린 위대한 유권자 혁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과 대선,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에서 이러한 시대정신의 역동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공허한 메이리일 뿐, 불법대선자금 수수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 행위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망국적 병폐인 지역감정 조장과 무차별적 색깔공세의 악령이 아직도 살아숨쉬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폭언, 몸싸움과 같은 추태가 9시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고,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좇아 이리저리 당을 옮기거나 승패에 불복하는 철새정치인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불신만을 잉태하며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시대의 미숙아로 전락하고 만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현실정치에서 희망과 감동의 정치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미래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 아이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현실정치에 절망하면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염원을 버리지 못하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4년 유권자 혁명의 주인이신 유권자 여러분!

유권자 혁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낙천낙선운동은 미답의 길입니다. 우리는 4년 전에 낙선운동이 걸어진 험난한 여정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에 불면의 밤을 새워야하는 고통스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반성과 혁신은 커녕 정쟁과 총선 승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측은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이대로 방관하기에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4년간 정치와 정치인으로 인해 겪었던 절망과 고통의 그늘을 다시 정치개혁의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2004년 유권자혁명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2004년 총선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퇴출시켜 2000년 총선혁명이 유권자 독립선언의 시작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유권자가 희망입니다.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유권자가 결심하면 정치는 반드시 바뀝니다.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유권자 운동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동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2004. 2. 24

대전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일동

[참고 1]

유권자위원회

○ 구성 <성, 연령, 자치구별 구성비>

2000대전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의 표본을 기초로 하여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참가단체 소속 회원과 일반시민 중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습니다.

○ 활동

- 표본 구성비 설정 : 2004. 2. 12 - 2004. 2. 21
- 유권자위원회 구성 : 2004. 2. 12 - 2004. 2. 23
- 2003. 2. 24 유권자위원회 개최 : 62명 참석

[참고 2]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철회) 명단 최종 심사자료

이 자료는 2004대전총선시민연대가 대전지역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된 사실이 모두 공천반대(철회) 명단 선정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중구, 16·15·14·12·11대)

■ 반개혁적 행위

- 2004년 2월 9일, 불법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구속중인 한나라당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 결의안 국회 본회의 긴급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서명.

▲ 소명 : 대전총선시민연대를 통해 처음으로 서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좌관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니 서명요청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여비서를 통해 서명해 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와관련하여 현재 보좌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본인은 서청원의원의 석방요구안에 ‘옳지않은 일’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보좌관의 불찰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 도덕성/사절

- 2002년 7월 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동료인 함석재 의원을 상임위원장 배정요청하자 이규택 총무가 "왜 반말을 하나", "한번 붙어 보자는 불래"하면서 상의를 벗자 본인도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고성이가 오가며 몸싸움 직전 상황 연출.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자민련 출신의 강창희 의원이 같은 자민련 출신인 함석재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줄 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거친 언사로 이규택 총무를 몰아 붙였습니다. (자막으로 “야 X자식아 한번 붙어볼래”) 먹살잡이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02.7.9. MBC 뉴스데스크 보도)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발단은 강창희 최고위원이 이규택 총무에게 함석재 의원의 상임위원장 배려를 요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이 총무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고(자막으로 “야, XX야 한 번 붙어볼래”), 이 총무가 이에 반발해 두 사람은 주먹다짐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자막으로 “왜 반말이야”) 상황은 이회창 후보가 질책하면서 끝났습니다.(자막으로 “이게 뭐요 시정잡배도 아니고”) 식물국회에다 저질 욕설 파문, 월드컵을 계기로 조성된 모처럼의 국민적 자긍심 속에 우리 정치권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02. 7. 9. KBS 9시뉴스 보도)

▲ 소명 : 7월 9일 MBC 9시뉴스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야 이XX자식아, 한번 붙어볼래”라고 자막처리가 되어 방송된 적이 있는데,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왜곡되어 방송된 것이다.

2. 오희중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 반유권자적 행위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 지역주민과의 약속파기

2002년 6월 합동연설회 유세에서 “오희중이 구청장 뽑아주면 2년후에 국회의원 갈거, 반 쪽짜리 국회의원 왜 뽑아주는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중략)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그때 정치판에서 제가 설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고 저는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많은 구태정치인들이 소망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저 오희중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략) 나를 잘 아는 우리 구민들은 청장님 청장님 우리 청장님 정말 잘하십니다. 다음에는 국회로 가셔야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회이야기 저 한마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연말이면 여덟아홉명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저 국회로 또 가라고 하실겁니다. 그렇죠 안갑시다. 가지 않습니다”

▲ 소명 :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획일적 잣대로 통제하려는 현행 제도를 지방의회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궐선거 실시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임기 또한 잔여임기가 아닌 4년 임기의 시작으로 규정되어야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규정의 미흡이나 제도적 모순에 대한 지적없이 구청장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3. 이병령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 반유권자적 행위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 지역주민과의 약속파기

▲ 소명 : 기회가 있으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장 임기 중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합동연설회 등 어느경우에서도 총선 불출마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

4. 임영호 (자유민주연합, 대전광역시 동구)

■ 반유권자적 행위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 지역주민과의 약속파기

- ▲ 소명 : 임기중 사퇴하는 것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행정공백의 문제는 선거제도의 잘못에 따른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임기를 채운다는 약속은 못지켰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는 약속만은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 반개혁적 행위

<장애인인권 탄압>

- 1999년 7월 7일 장애인 노점상 윤창영씨가 동구청의 단속에 항의하며 동구청사 내에서 분신하는 사건 발생, 사건 발생이후에 사후조치 미흡

- ▲ 소명 : 계고장 없이 적법하지 않게 단속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계고장은 총 5회 발송 하였으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인에게 2차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5.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서구을, 16·15대)

■ 기회주의적 정치행태

- 2002.11.14 자민련 탈당, 2002.11.15 한나라당 입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쓰레기가 난무하는 하치장에 불과하다”고 발언(2002.5.2 자민련 대 전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서)

“한나라당은 전부 정신이상자들만 모인 것 같다”고 발언(2002.5.22 자민련 대전시장 후보 선출대회에서)

자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양희 의원의 조금형 비서관은 "우리(이양희 의

원)가 갈 때는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안 받을 때 아닌가. 당시 선별해서 받느니 마느니 했는데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이적료) 부인했다. 그는 "그 전에 갈 때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이 다 돼 있었다.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을 때"라면서 "당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다 된다고 선별해서 받을 때인데 2억원씩 쥐가면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 소명 : 정치활동을 하면서 당적변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지를 찾아 소신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적변경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선택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확신에 따른 소신과 신념의 결단이었다.

■ 반복적인 지역감정 선동

- "충청도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땅이 아니다. 주인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다. JP가 충청도의 주인이다.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데 우리도 하나로 똘똘 뭉쳐 충청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자"고 선동(2002.1.16.문화일보)
- "서울 국회에 가면 충청도 국회의원들은 사람취급도 받지 못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이 압승해 견제함을 과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역주의에 호소(2002.5.2. 자민련 대전선거대책본부 발대식, 인터넷 디트뉴스)
- "한나라당 사람을 대전시장으로 뽑아놓으면 대전시민 모두가 교도소를 가야할 것"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지부장은 "대전의 발전을 저해한 당이 한나라당"이라며 "충청도에 국가기관이 내려오려고 하면 부산, 대구, 경남, 경북으로 돌린 당이 한나라당"이라고 은근히 지역주의를 부추겼다(2002.5.22. 자민련 대전시장후보 선출대회, 인터넷 디트뉴스)

[참고 3]

대전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I.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대전지역 20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2004년 4월에 실시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을 살펴보는 한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II. 조사의 설계

- 조사대상 : 대전지역 거주 유권자
- 조사방법 : ARS 전화여론조사
- 조사규모 : 1,248명 (KT전화번호 통화표본수 10,0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80\%$
- 조사기간 : 2004년 2월 16일
- 조사기관 : 디지털 정치문화 연구소

III. 주요조사 항목

- 17대 총선에 대한 투표 참여여부
-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견해
-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낙천낙선대상자 추가 발표에 대한 견해
- 지역감정 조장자의 낙천낙선대상 포함에 대한 견해
- 임기중 중도사퇴한 자치단체장의 낙천낙선대상 포함에 대한 견해
- 서청원 석방 결의안 가담의원의 낙천낙선대상 포함에 대한 견해

IV. 표본의 특성

○ 자치구별 분류

	빈도	퍼센트
대덕구	156	12.5
동구	231	18.5
서구	401	32.1
유성구	227	18.2
중구	233	18.7
합계	1248	100.0

○ 성별 분류 (총응답수 1,235명)

	빈도	퍼센트
남성	630	51.0
여성	605	49.0
합계	1235	100.0

(10대 제외 응답수 1,072명)

	빈도	퍼센트
남성	530	49.4
여성	542	50.6
합계	1072	100.0

○ 연령별 분류 (총응답수 1,167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100	51	85	105	112	142
여성	63	59	132	127	100	91
응답수	163	110	217	232	212	233
응답률	14.0%	9.4%	18.6%	19.9%	18.2%	20.0%

(10대 제외 응답수 1,004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성	51	85	105	112	142
여성	59	132	127	100	91
응답수	110	217	232	212	233
응답률	11.0%	21.6%	23.1%	21.1%	23.2%

V. 조사결과 분석

1. 17대 총선에 대한 투표 참여여부

- 질문/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귀하는 투표하실 계획입니까? (총응답수 802명)

	투표할것	그때가서결정	투표하지않을것
남성	320	86	23
여성	238	109	26
응답수(명)	558	195	49
응답률(%)	69.6%	24.3%	6.1%

○ 전체분석

지난 16대 총선에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던 대전지역(전국 57.2%, 대전 53.3%) 유권자들은 17대 총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69.6%에 달해, 부패정치에 대한 냉소와 절망감이 오히려 낡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의지를 응집시켜준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6.1%에 불과했으며, 그때가서 결정하겠다는 응답자가 23.4%로 나타났다.

○ 특성별 분석

▲성별 분석/ 투표참여에 대해서는 남성(74.59%)이 여성(63.81%)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그때가서 결정하겠다는 응답자는 여성(29.22%)이 남성(20.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는 여성(6.97%)이 남성(5.3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70.3%), 40대(69.6%), 50대(68.2%)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분석/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구(75.6%)지역 유권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67.8%), 대덕구(67.6%), 유성구(67.1%), 중구(63.4%)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2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견해

- 질문/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시민단체들이 2004총선시민연대를 만들어 낙천낙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응답수 887명)

	찬성	반대	잘모르겠다
남성	263	134	61
여성	219	80	130
응답수(명)	482	214	191
응답률(%)	54.3%	24.1%	21.5%

○ 전체분석

대전지역 유권자들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반대가 24.1%에 불과한 반면, 찬성은 54.3%에 달해,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성별 분석

▲성별 분석/ 찬성한다(54.3%)는 응답자는 남성(57.42%)과 여성(51.05%)이 고르게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24.1%)는 응답자는 여성(18.65%)이 남성(29.2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고 입장을 유보한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30.3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0대(70.4%), 40대(63.3%), 20대(61.1%), 60대이상(40.1%), 50대(39.9%)순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0대(34.2%), 60대이상(33.3%), 20대(18.9%), 40대(17.7%), 30대(14.3%)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서구(59.8%), 대덕구(56.8%), 유성구(53.6%), 중구(50.0%), 동구(49.1%)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대덕구(26.1%), 서구와 유성구(24.7%), 중구(23.4%), 동구(21.1%)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낙천낙선대상자 추가발표에 대한 견해

- 질문/ 대전의 시민단체들이 전국총선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별도의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 추가발표하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응답수 849명)

	찬성	반대	모르겠다
남성	250	121	72
여성	223	66	117
응답수(명)	473	187	189
응답률(%)	55.7%	22.0%	22.3%

○ 전체분석

대전지역 유권자들은 대전의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대상자를 추가로 선정 발표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5.7%에 달한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2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돈정치와 부패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괴감이 그 여느때보다 깊다는 반증이며, 지역정치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와 병폐를 들여다보고 투표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특성별 분석

▲성별 분석/ 추가선정 발표에 찬성한다(55.7%)는 응답자는 남성(56.43%)이 여성(54.9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22.0%)는 응답자도 남성(27.31%)이 여성(16.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0대(66.3%), 40대(65.9%), 30대(65.3%), 50대(45.4%), 60대이상(39.8%)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0대이상(32.0%), 50대(29.7%), 30대(17.9%), 40대(14.4%), 20대(11.2%)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자치구별 분포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서구(58.1%), 동구(56.3%), 대덕구(55.2%), 동구와 유성구(5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대덕구(23.8%), 서구(22.5%), 유성구(21.5%), 중구(21.2%), 동구(20.5%) 순으로 나타났다.

4. 지역감정 조장자의 낙천낙선대상 포함에 대한 견해

- 질문/ 반복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을 낙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응답수 830명)

	찬성	반대	모르겠다
남성	318	64	59
여성	243	56	90
응답수(명)	561	120	149
응답률(%)	67.6%	14.5%	18.0%

○ 전체분석

대전지역 유권자들은 반복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자가 67.6%에 달해, 이번 ARS여론조사 질문내용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적 정치이익만을 쫓고 있는데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드러낸 것이며, 이번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겨우 14.5%에 불과했다.

○ 특성별 분석

▲성별 분석/ 지역감정 조장자에 대한 낙천낙선대상 포함 견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남성(72.11%)이 여성(62.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남성(14.51%)과 여성(14.40%)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세대별 구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으며, 20대(77.4%), 40대(76.8%), 30대(69.7%), 50대(65.0%), 60대이상(53.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60대이상(22.1%), 50대(16.9%), 30대(13.5%), 20대(10.7%), 40대(8.2%)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대덕구(76.0%)가 가장 높았으며, 서구(70.1%), 중구(67.8%), 유성구(62.6%), 동구(62.3%)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입장은 유성구(17.4%), 서구(15.3%), 동구(13.0%), 중구(12.8%), 대덕구(12.5%)로 나타났다.

5. 임기중 중도사퇴한 자치단체장의 낙천낙선대상 포함에 대한 견해

- 질문/ 임기 4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직하여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경우 낙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응답수 819명)

	찬성	반대	모르겠다
남성	236	123	79
여성	203	70	108
응답수(명)	439	193	187
응답률(%)	53.6%	23.6%	22.8%

○ 전체분석

자치단체장 총선출마로 인한 중도사퇴에 대해서는 제도적 결함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찬성론과 주민과의 약속파기, 행정공백, 재정낭비라는 반대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유권자들은 자치단체장들의 중도사퇴에 대해 53.6%가 낙천낙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낙천낙선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23.6%에 불과해 결국 유권자들은 자치단체장들의 약속파기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특성별 분석

▲성별 분석/ 낙천낙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다(53.6%)는 응답자는 남성(53.88%)과 여성(53.28%)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23.6%)는 응답자는 남성(28.08%)이 여성(18.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세대별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는데 40대(58.6%), 30대(58.4%), 50대(56.0%), 20대(54.9%), 60대이상(40.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0대이상(33.7%), 20대(25.6%), 50대(21.1%), 40대(20.7%), 30대(17.8%)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서구(55.4%), 유성구(55.2%), 대덕구(54.9%), 중구(49.0%), 동구(49.0%)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동구(25.9%), 대덕구(25.5%), 서구(23.4%), 유성구(22.1%), 중구(21.1%) 순으로 나타났다.

6. 서청원 석방 결의안 가담의원의 낙천낙선대상 포함에 대한 견해

- 질문/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구속중인 한나라당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결의안 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을 낙천낙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응답수 806명)

	찬성	반대	모르겠다
남성	282	94	56
여성	231	75	68
응답수(명)	513	169	124
응답률(%)	63.6%	21.0%	15.4%

○ 전체분석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선정기준 적용에 있어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감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사안과 그 국회 처리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최근(2003.2.9)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석방요구결의안 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을 낙천낙선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3.6%에 달해 불법정치자금과 부패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민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1.0%에 그쳤다.

○ 특성별 분석

▲성별 분석/ 낙천낙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63.6%)는 응답자는 남성(65.28%)이 여성(61.76%)보다 높았으며, 반대한다(21.0%)는 응답자도 남성(21.76%)이 여성(20.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낙천낙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세대별 모두 높게 나타났다. 30대(72.5%), 20대(65.4%), 40대(63.3%), 50대(63.2%), 60대이상(54.2%).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0대이상(28.2%), 20대(21.0%), 40대(20.9%), 50대(19.5%), 30대(15.9%)

▲자치구별 분석/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대덕구(68.6%), 유성구(65.8%), 중구(62.5%), 동구(62.2%), 서구(62.9%)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동구(23.8%), 서구(22.7%), 유성구와 중구(20.1%), 대덕구(15.7%)로 나타났다.